

# 2012년 복지재정수준의 전망

–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적정수준 탐색 –

*Projections of Social Expenditures 2012*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고에서는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SOCX) 자료를 중심으로 각국의 복지재정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다음, 신정부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2012년 소득 3만불대의 복지수준을 제시해 보았다. 비교의 준거는 소득수준과 고령화수준, 그리고 복지국가의 유형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적연금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비전2030'에 따라 복지지출을 확충한다면 2012년에는 OECD 영미형 국가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은 OECD 평균과 영미형의 중간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2020년에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 OECD 평균에 접근하기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의 공공+민간법정+연금성숙도를 감안한 복지재정 수준을 20.0%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재정의 구성은 공공 복지재정지출 14.0%, 민간법정복지지출 2.0%, 연금성숙도 4.0%가 되며,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공공복지재정(12.0%)보다 2.0%p 만큼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 1. 머리말

복지재정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는 국가재정 운용의 난제 중의 하나이다. 과도한 복지투자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과소한 복지투자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협한다는 일반론에 얽매어 있는 것이 통상의 현실 인식이다.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동반성장론이 등장하였고, 사회투자론이 대두되었다. 즉 복지와 성장은 상호 배척적(trade-off)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에 있음을 강조하고, 선성장-후분배 보다는 선분배-후성장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복지재정의 적정한 투입수준은 영향을 받게 된다.

나에 따라 복지재정의 적정한 투입수준은 영향을 받게 된다.

IMF 위기 이후에 복지재정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은 이대로 두면 장래에 과도하게 될 위험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현재에도 과도하다는 등 다양한 분석결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분석 방법과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는 데에서 연유한다.

본고에서는 OECD의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SOCX) 자료를 중심으로 각국의 복지재정 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다음, 신정부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2012년 소득 3만불대의 복지수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비교의 준거는 소득수준과 고령화수준, 그리고 복지국가의 유형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에 놓여 있을 시점에서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의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유사한 여건'이란 곧 복지재정을 결정하는 여건 혹은 요인이며, 복지재정의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고령화의 정도, 복지제도 성숙도, 복지이념(복지국가유형의 선택)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접근방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한국의 2006년 소득수준(1인당 GDP 기준) 18,372불을 기준으로 1만8천불대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 수준('공공사회지출의 대 GDP 비율')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2012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 전망치 3만불을 기준으로 3만불대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재정 목표를 가늠하여 보았다.<sup>1)</sup>

둘째, 고령화 수준에 따른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한국의 2006년 고령화율 9.5%를 기준으로 고령화율 9.5%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2012년의 고령화율 전망치 11.7%를 기준으로 고령화율 11.7%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하였다.

셋째, 소득수준과 고령화율 수준에 따른 복지수준을 비교하면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북구형·대륙형·영미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하여 특징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영미형은 조세조달방식의 영미형 국가와 사회보험방식의 영미형 국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정학적으로는 북구형에 속하나 복지제도는 북구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소득수준, 고령화율, 복지이념(복지국가유형), 복지제도의 성숙도('연금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의 적절한 복지재정수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늦게 도입하여 아직 성숙기에 들어서지 못하였으므로 연금제도가 성숙한 다른 국가들과 복지재정수준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제도가 성숙되는 시점에서의 연금지출을 계산하고, 동 연금지출을 가산한 복지재정지출을 OECD국가와 비

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up>2)</sup>

모든 비교에서 복지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복지재정수준은 국민부담률과 거의 비례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법정복지지출(private mandatory expenditure)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복지지출은 아니지만 민간이 강제로 부담하는 복지지출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3.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수준의 비교

### 1) 소득 1만8천불대(한국 2006년)의 비교

소득 1만8천불 대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OECD 평균의 40% 수준에 해당한다(〈표 1〉 참조). 즉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7.5%로 추정되며, OECD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아직 연금지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므로 연금제도가 성숙된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한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GDP대비 11.5%로 추정되며, 여전히 OECD 평균의 61% 수준에 불과하다. 영미형 국가군의 평균은 13.7%로써 영

미형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의 71%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의 83% 수준이다. 그렇지만 향후 공적연금의 부담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률 수준은 높은 편이며, 이는 국민부담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복지부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3]에서는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관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의 국민부담은 그것이 조세든 사회보험이든 복지의 확대 정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민부담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부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규모와 복지재정 규모 간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부채가 반드시 복지재정의 확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2) 소득 3만불 대(한국 2012년)의 비교

'비전2030'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12년의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12.0%로 OECD 평균인 21.2%의 57%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는 2006년의 40% 수준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러나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

1) Global Insight 는 2007~11년간 실질GDP 성장률을 4.6%, 5.8%, 5.7%, 5.2%, 4.7%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 전망에 따르면 2011년의 명목 1인당GDP는 25,417불이 된다. 한편 신정부에서 연7% 경제성장이 실현된다면 2012년에 1인당 소득 3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여기서의 복지재정지출은 엄밀하게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다.

3) 정부·민간합동작업단이 작성한 'VISION 2030'(2006.8)에서 제시한 전망에 기초하여 내삽법으로 추정하였음. '비전2030'은 복지재정수준을 2005년 8.6%를 기준으로 2019년 15.0%(미국수준), 2024년 17.0%(일본수준), 2030년 21.0%(OECD평균)를 제안하고 있음.

표 1. 소득 1만8천불에 도달한 시기의 복지국가유형별 복지재정 수준

(단위: GDP 대비 비율 %)

구분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국민 부담률(a)	민간법정복지 부담률 <sup>2</sup> (b)	a+b	공공 사회지출	정부부채
OECD 평균	27.5	8.6	36.1	0.7	36.8	18.9	59.7
북구형	38.3	8.2	46.5	0.1	46.6	23.8	48.7
네덜란드	23.6	17.7	41.3	0.5	41.8	23.0	88.2
대륙형	24.6	12.0	36.6	0.9	37.5	22.0	74.6
영미형	27.0	3.9	30.9	0.5	31.4	13.7	49.4
영미형 <sup>1</sup>	29.7	2.2	31.9	0.7	32.7	13.7	42.1
영미형 <sup>2</sup>	22.5	6.5	29.1	0.2	29.2	13.7	67.6
한국 (2006)	20.3	5.4	25.7	2.0 <sup>2</sup>	27.7	7.5 (11.5) <sup>3</sup>	27.9

주: 1) 영미형<sup>1</sup>은 tax-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이며(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랜드), 영미형<sup>2</sup>는 social insurance 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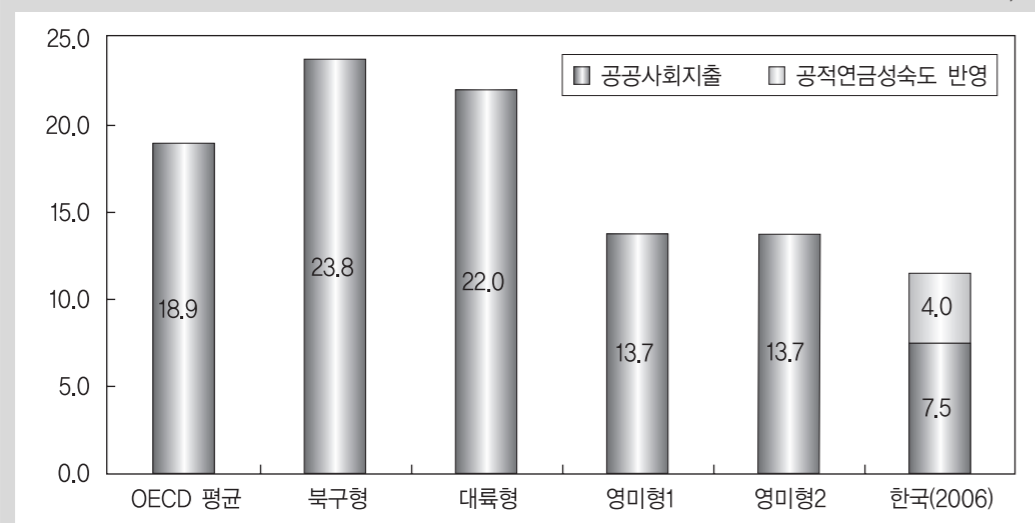
2) 민간법정복지지출(private mandatory expenditure)이며 동 지출만큼 부담한다고 간주함. 한국 2006년 전망치는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치를 이용하였음

3) 한국 ( )내는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한 공공사회지출 수준임. (연금성숙기를 2030년으로 가정하면, 2030년의 공적연금지출 규모는 GDP 대비 5.2%로 전망되며, 2006년의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1.2%이므로 공적연금 성숙도 반영분은 4%로 볼 수 있음. 따라서 7.5%에 4%를 추가한 11.5%가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Oct. 2007); OECD SOCX 2007 (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7)

그림 1. 소득 1만8천불대에서의 공공복지재정 수준 비교

(단위: GDP대비 비율, %)



주: 한국은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한 공공복지재정 수준임.

그림 2. 1만8천불 소득수준대에서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GDP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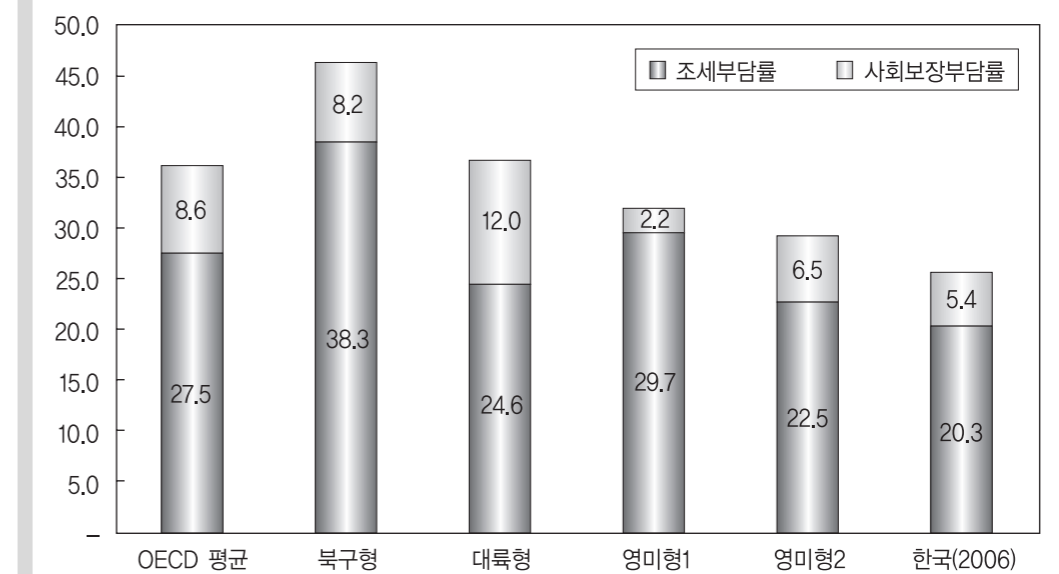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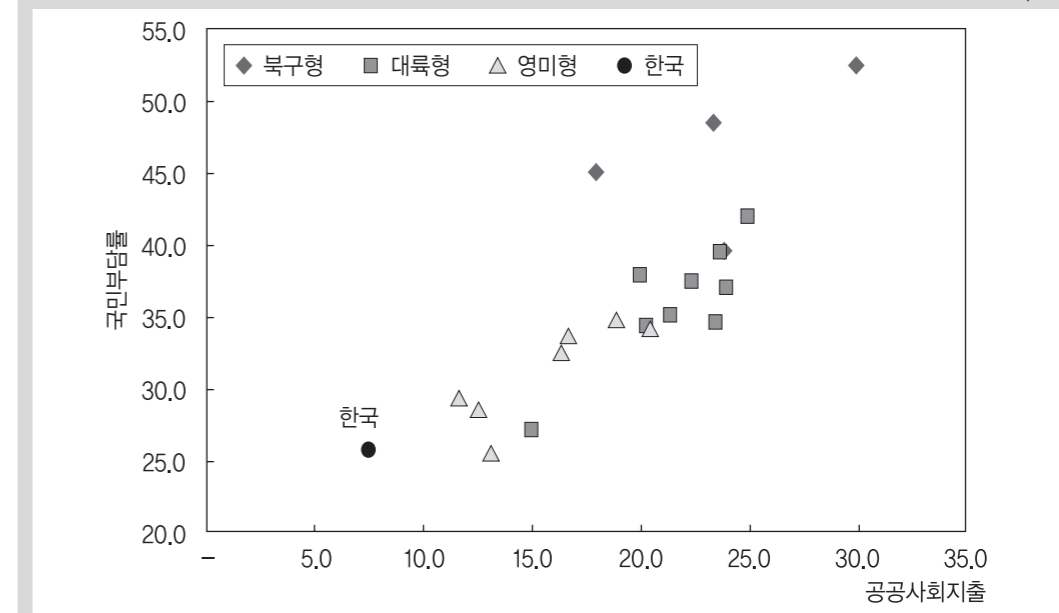


그림 3. OECD 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관계(소득수준 1만8천불 대)

(단위: GDP대비 비율, %)



안한 한국의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16%로 전망되는데, 영미형 국가군은 16.4%로써 영미형 평균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한국의 공공복지가 3만불대의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지향한다면 '비전 2030'의 목표치 보다 5.5%p 높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즉 2012년 공공복지지출 전망치 12.0%에 5.5%를 더한 17.5%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적연금 성숙분 4%를 감안하면 21.5%로써 OECD 평균(21.2%)에 근접하게 된다.

2012년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이 영미형 평균의 복지재정을 지향한다면 2006년의 국민부담률이 25.7%(조세 부담률

20.3%, 사회보장부담률 5.4%)인데, 2006년 대비 2012년 공공복지재정 4.5%p 상승분을 부채를 통하지 않고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다면 국민부담률은 30.2%가 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장래성숙분 4%를 합산하면 34.2%가 되는데, 이는 영미형의 평균인 32.1%에 근접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이때 국민부담률 30.2%를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부담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만일 조세 부담률을 20.3%에 묶어 놓는다면 사회보장부담률은 5.4%에서 9.9%로 인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재정 부담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발생할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재정은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다.

표 2. 3만불 소득대에 도달한 시기의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재정 수준 비교

(단위: GDP 대비 비율, %)

구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국민부담률	민간법정 복지부담률 <sup>2)</sup>	국민부담+ 민간복지부담	공공사회 지출	정부부채
OECD	28.6	8.5	37.2	1.0	38.1	21.2	59.8
북구형	37.9	9.2	47.1	1.3	48.4	27.1	62.2
네덜란드	23.6	13.4	37.0	0.7	37.7	20.7	61.4
대륙형	26.2	12.6	38.8	1.0	39.6	24.2	74.7
영미형	28.0	4.2	32.1	1.1	32.9	16.4	47.5
영미형 <sup>1)</sup>	31.8	2.9	34.6	1.9	35.8	17.7	41.7
영미형 <sup>2)</sup>	21.6	6.3	27.9	0.2	28.1	14.1	57.1
한국(영미형, 2012)	20.3	9.9	30.2	2.0 <sup>2)</sup>	32.2	12.0(16.0) <sup>3)</sup>	-
한국(평균형, 2012)	23.0	10.0	33.0	2.0	35.0	17.5(21.5)	-

주: 1) 영미형1은 tax-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이며(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미형2는 social insurance 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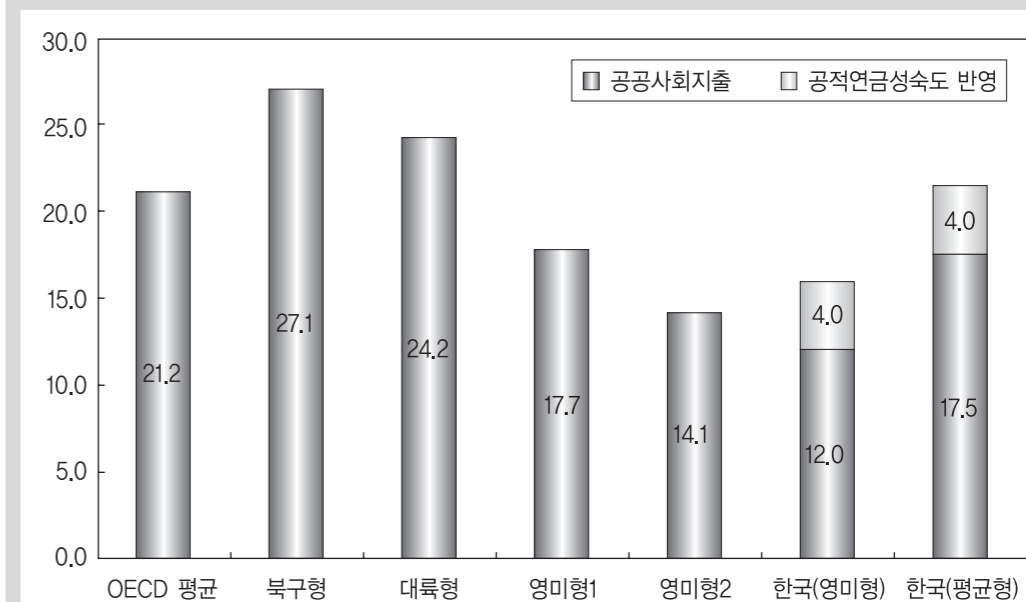
2) 민간법정복지지출(private mandatory expenditure)이며 지출한 만큼 부담한다고 간주함. 한국의 2012년 전망치는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치 이용(2006년 기준 수치가 경제성장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

3) 한국(영미형)의 공공복지지출은 '비전2030'의 전망치이며, ( ) 내는 공적연금성숙을 감안한 공공복지지출임. 한국(평균형)은 2012년에 OECD 평균인 약 21.5%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Oct. 2007); OECD SOCX 2007(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7)

그림 4. 3만불 소득수준대에서의 공공복지재정 수준 비교

(단위: GDP대비 비율, %)



주: 1) 한국(영미형)은 '비전2030'의 전망을 따랐을 경우의 2012년 복지재정수준 12.0%에 연금제도 성숙을 가정했을 경우의 4%p를 가산한 16%임.

2) 한국(평균형)은 OECD 평균복지재정수준 21.2%에 근접하는 수준임. 다만, 연금성숙도 4%를 제외하면 17.5%의 공공복지지출이 필요함.

그런데 한국이 OECD 평균의 복지재정을 지향한다면 국민부담률이 33% 수준까지 상승해야 할 것이고, 공적연금 장래부담 증가분 4%를 합산하면 37%가 되어 OECD 평균 37.2%와 유사하게 된다. 이때에는 조세부담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회보험 부문 외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급팽창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세출구조조정 만으로는 충분히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23%까지 인상할 것을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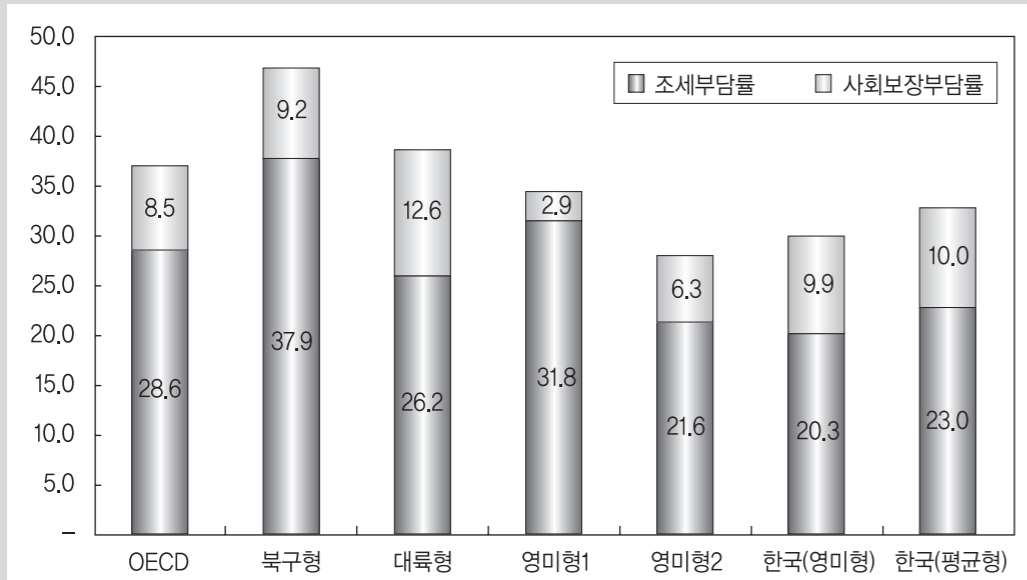
#### 4. 고령화 수준에 따른 복지재정 수준 비교

##### 1) 고령화율 9.5%(한국 2006년) 시점에서의 비교

고령화율 95%에 도달한 2006년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은 75%이며, 영미형 3개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는 1980년대 초반에 비슷한 고령화수준에 도달하여 복지재정수준은 평균 122%이었다. 따라서 복지재정수준은 영미형 3개 국가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연금 성숙도를

그림 5. 3만불 소득수준대에서의 국민부담률 수준 비교

(단위: GDP대비 비율, %)



주: 한국은 2012년의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국민부담률 수준임. 영미형은 '비전2030'의 복지재정수준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 20.3%+사회보장부담 9.9%를 제시한 것임. 평균형은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 23.0%, 사회보장부담률 10.0%를 제시한 것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은 11.5%가 되어 영미형 국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이 고령화율 9.5%에 도달한 시기는 북구형은 1965-1970년, 대륙형은 1963-1970년이다. 그러나 OECD 복지재정자료('OECD SOCX')는 198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발표되기 때문에 1980년 이전의 북구형 및 대륙형 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을 비교할 수는 없다.

## 2) 고령화율 11.7%(한국 2012년) 시점에서의 비교

고령화율 11.7%에 도달하는 한국의 2012년

복지재정수준은 12.0%로 전망되나, OECD 10개국은 1990년경에 유사한 고령화율에 도달하여 17.2%의 복지재정수준을 나타낸다. 2012년경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이 '비전2030'을 따를 경우에 OECD평균의 7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금성숙도를 감안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16%로써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OECD 국가중 북구형과 대륙형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빠져 있어 비교의 준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영미형 7개 국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 일본)의 경우 고령화율 11.7%를 경험한 시기는 1993년경으로, 당시

표 3. 고령화율 9.5%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의 복지재정수준

(단위: GDP 대비 비율, %)

영미형	호 주	연도	고령화율 (%)	조세 부담률(a)	사회보장 부담률 (b)	국민 부담률 (a+b)	민간법정 복지 부담률(c)	국민 부담률+c	공공복지 지출(d)	정부 부채 e
	일본	1982	9.6	18.4	8.0	26.4	0.1	26.5	11.2	64.0
한국		2006	9.5	20.3	5.4	25.7	3.2	28.9	7.50 (11.5)	27.7

주: 1) 한국의 ( )내 수치는 연금 성숙도를 감안할 때의 지출수준임.  
2) 대륙형과 북구형 국가들이 고령화율 9.5%에 도달한 시기는 1963~1970년으로 이 당시의 복지재정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지 않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Oct. 2007); OECD SOCX 2007(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7)

표 4. 고령화율 11.7%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의 복지재정수준

(단위: GDP 대비 비율, %)

국가군	연도	고령화율 (%)	조세 부담률(a)	사회보장 부담률 (b)	국민 부담률 (a+b)	민간법정 복지 부담률(c)	국민 부담률+c	공공복지 지출 (d)	정부부채 (e)	
북구형	네덜란드	1982	11.7	23.7	17.9	41.6	0.4	42.0	26.3	71.7
대륙형	스페인	1984	11.8	16.1	11.2	27.3	0.0	27.3	17.2	-
	포르투갈	1983	11.7	19.4	6.8	26.2	0.3	26.5	11.0	-
영미형	호주	1994	11.8	28.0	0.0	28.0	0.3	28.3	16.2	40.1
	뉴질랜드	1999	11.7	33.4	0.0	33.4	0.0	33.4	19.3	39.6
	캐나다	1993	11.7	30.4	5.0	35.4	0.0	35.4	21.2	96.3
	아이슬란드	2003	11.7	34.6	3.2	37.8	5.1	42.9	18.7	40.8
	아일랜드	1993	11.5	28.8	5.2	34.0	0.0	34.0	17.1	-
	미국	1983	11.7	18.9	6.0	24.9	0.4	25.3	14.1	48.8
	일본	1989	11.6	21.4	8.4	29.8	0.2	30.0	11.0	70.8
영미형 평균		1993	11.7	27.9	4.0	31.9	0.9	32.8	16.8	56.1
OECD 평균		1990	11.7	25.5	6.4	31.8	0.7	32.5	17.2	58.3
한국		2012	11.7				2.0		12.0(16.0)	-

주: 1) 자료의 제약상 1980년 이후에 고령화율 11.7%에 도달한 국가들만을 선택하였음.  
2) 한국의 ( )내 수치는 연금성숙도를 감안한 지출수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Oct. 2007); OECD SOCX 2007(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7)

복지재정수준은 16.8%이었다. 연금성속도를 감안한 한국의 2012년 복지재정수준 16.0%는 영미형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복지재정수준 비교 종합

2006년 기준의 소득수준 1만8천불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공공복지재정수준은 낮게 보인다. 1만8천불 대의 복지재정수준은 OECD 평균은 18.9%, 영미형은 13.7%이었다. 그런데 연금성속도와 민간법정 복지재정 까지 합산한 것을 총 복지재정수준으로 보는 경우 한국은 13.5%가 되어 영미형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아일랜드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영미형 국가군 수준인 13.7%에 근접하게 된다. 2006년 현재의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수준을 비교하면 OECD 영미형 3개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는 12.2%로써 한국의 공공복지재정 수준은 아직 낮지만, 연금성속도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며 민간법정복지재정까지 합산할 경우 한국은 13.5%가 되어 영미형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소득 3만불 시대에 '비전2030'에 따른 공공복지재정의 전망치는 12.0%로써 OECD 국가에 비해 낮으나(OECD 평균은 21.2%, 영미형은 16.4%), 연금성속도와 민간법정 복지지출을 합산하면 최대 18.0%가 되어

OECD의 평균인 22.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미형 17.5%에는 근접하게 된다. 2012년의 고령화 수준에 비추어 복지수준을 비교하면 OECD 영미형의 공공복지재정은 16.8%이다. 한국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연금성속도를 감안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민간법정 복지재정까지 감안할 경우 한국은 18%가 되어 OECD영미형 국가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함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나, 한국이 '비전2030'에 따라 복지를 확충하게 된다면 2012년에는 OECD영미형 수

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게 될 것이다.

### 6. 맺는 말: 적정 복지재정수준을 탐색하며

복지재정수준의 적정한 목표는 OECD의 평균이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능력, 복지국가의 이념 지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이념적 지향은 북구형 국가책임의 보편적 복지와 영미형 자유주의적 잔여형 복지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판단한다. 근래에 북구형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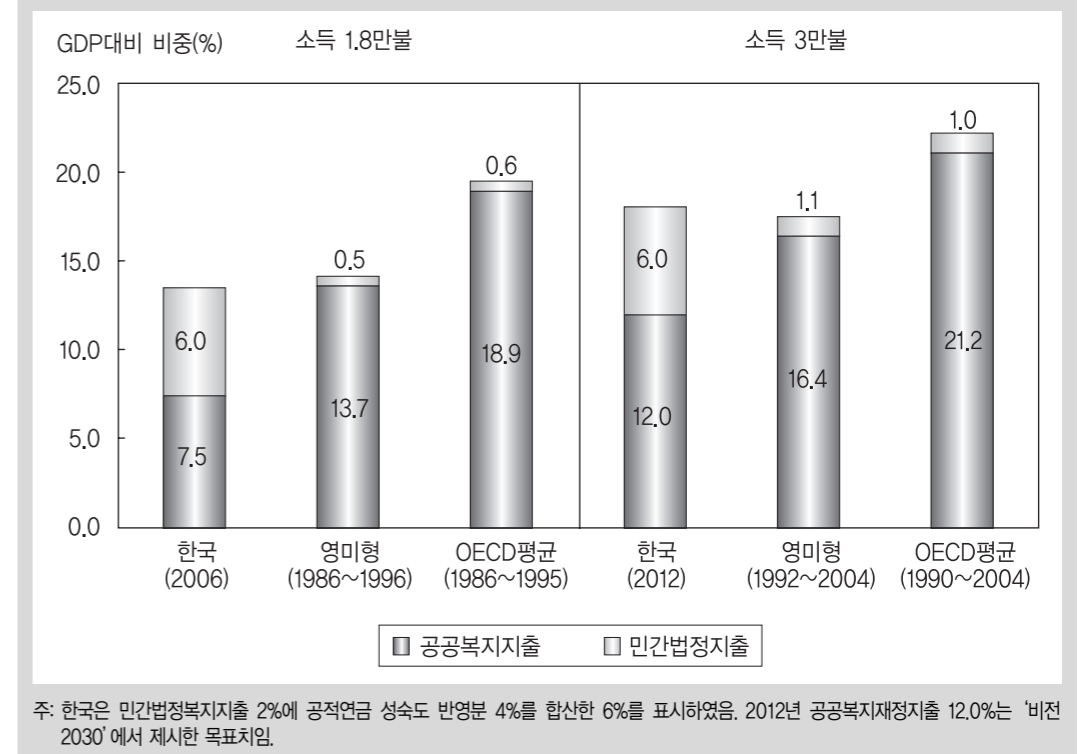
표 5. 소득수준, 고령화수준, 복지유형을 고려한 복지재정수준의 종합비교

(단위: GDP 대비 비율, %)

비교의 기준	소득 1만8천불 / 고령화 9.5% 시점		소득 3만불 / 고령화 11.7% 시점	
	2006년		2012년	
한국의 전망	공공복지재정	7.5%(11.5%) <sup>1)</sup>	공공복지재정('비전2030')	12.0%(16.0%) <sup>1)</sup>
	공공+민간법정 복지재정	9.5%(13.5%) <sup>1)</sup>	공공+민간법정 복지재정	14.0%(18.0%) <sup>1)</sup>
OECD국가들의 평균 (소득기준)	소득 1만8천 불 도달시 (1986~1995년)		소득 3만불 도달시 (1990~2003년)	
	공공복지재정	8.9%	공공+민간법정 복지재정	22.2%
OECD국가 영미형 (소득기준)	소득 1만8천불 도달시 (1986~1996년)		소득 3만불 도달시 (1992~2004년)	
	공공복지재정	13.7%	공공복지재정 <sup>2)</sup>	16.4%
OECD국가들의 평균 (고령화기준)	고령화 9.5% 도달시		고령화 11.7% 도달시	
	- 적절한 data 없음		- 적절한 data 없음	
OECD국가 영미형 (고령화기준)	고령화 9.5% 도달시 (1981년 전후)		고령화 11.7% 도달시 (1993년 전후)	
	공공복지재정	12.2%	공공복지재정	16.8%
	공공+민간법정 복지재정	12.3%	공공+민간법정 복지재정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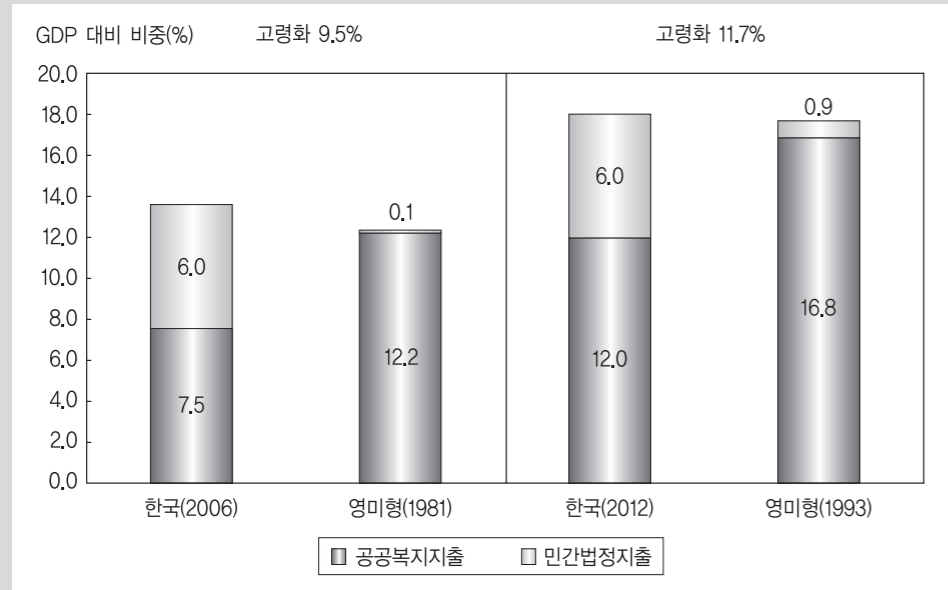
주: 1) ( ) 내는 연금성속을 가정하였을 때의 연금재정을 가산한 복지재정수준임  
 2) 3만불 도달시 OECD 영미형 중에서 tax financing 국가군은 17.7%(민간법정복지를 합하면 19.6%, social insurance financing 국가군은 14.1%(민간법정복지를 합하면 14.3%)

그림 6. 공공복지재정수준의 비교 (동일 소득기준)



주: 한국은 민간법정복지지출 2%에 공적연금 성속도 반영분 4%를 합산한 6%를 표시하였음. 2012년 공공복지재정지출 12.0%는 '비전 2030'에서 제시한 목표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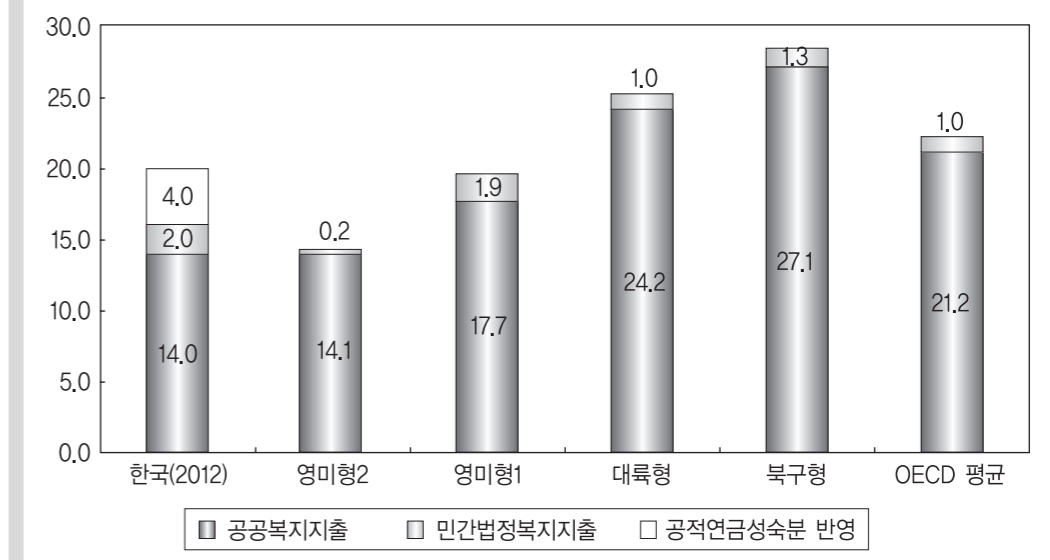
그림 7. 공공복지재정수준의 비교 (동일 고령화율 기준)



주: 한국은 민간법정복지지출 2%에 공적연금 성숙도 반영분 4%를 합산한 6%를 표시하였음. 2012년 공공복지재정지출 12.0%는 '비전2030'에서 제시한 목표치임.

그림 8. 소득 3만불대의 한국의 적정 공공복지재정 수준

(단위: GDP대비 비율, %)



주: 1) 한국은 공공복지재정 14.0% + 민간법정복지지출 2.0% + 공적연금성숙도 반영분 4%  
 2) 영미형1은 조세방식 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이며, 영미형2는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표 6. 소득 1만8천불→3만불 상승에 따른 공공복지재정의 변화와 한국의 적정수준 탐색

		소득상승 시기		소요 연수	공공복지지출 변화 (GDP 대비 비율, %)		공공+민간법정복지 지출 변화 (GDP 대비 비율, %)	
		18,000불	30,000불		변화	증 감	변화	증 감
		OECD	평균		1986~1995	1990~2004	9.2년	18.9 → 21.2
OECD	북구형	1986~1987	1991~2003	8.7년	23.8 → 27.1	3.3	23.9 → 28.4	4.5
	대륙형	1986~1990	1990~2003	9.2년	22.0 → 24.2	2.2	22.9 → 25.2	2.3
	영미형	1986~1996	1992~2004	9.6년	13.7 → 16.4	2.7	14.2 → 17.5	3.3
	영미형1	1986~1996	1992~2004	9.6년	13.7 → 17.7	4.0	14.4 → 19.6	5.2
	영미형2	1986~1995	1992~2002		13.7 → 14.1	0.4	13.9 → 14.3	0.4
한국	'비전2030' 계획	2006	2012	6년	7.5 <sup>p</sup> → 12.0 <sup>i</sup> (11.5 <sup>i</sup> → 16.0 <sup>i</sup> )	4.5	9.5 <sup>p</sup> → 14.0 <sup>i</sup> (13.5 → 18.0)	4.5
	적정수준 탐색	2006	2012	6년	7.5 <sup>p</sup> → 14.0 <sup>i</sup> (11.5 → 18.0)	6.5	9.5 <sup>p</sup> → 16.0 <sup>i</sup> (13.5 → 20.0)	6.5

주: 1) p는 잠정치, i는 전망치; 한국의 ( ) 내 수치는 공적연금 성숙도를 반영한 값임.  
 2) 북구형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대륙형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영미형1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미형2는 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가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가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에 영미형은 잔여형에서 보편형을 지향하려는 개혁 동향을 보임으로써 상호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2012년은 OECD 평균과 영미형의 중간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2020년에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 OECD 평균에 접근하기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성장동

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의 공공+민간법정+연금성숙도를 감안한 복지재정 수준을 20.0%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재정의 구성은 공공복지재정지출 14.0%, 민간법정복지지출 2.0%, 연금성숙도 4.0%가 되어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공공복지재정 12.0%보다 2.0%p 만큼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민간복지